



자료번호 : A1-2008-0056

자 료 명 :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형식적이지 않고 보다 실천가능성이 높고 선진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조틀을 새롭게 정비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의견을 잘 정리하여 정책건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주관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원석(016-243-7769)

대행기관 : 현대리서치 실사연구팀 김지민(02-3218-9656)

*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내부 기본과제 연구이므로,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활용되며, 개인적인 견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회신처 : 현대리서치 실사연구팀 김지민

- 전화번호 : 02-3218-9655

- Fax : 02-3446-9518

- E-mail : she32@hri4u.com

설문 마감 기간 : 2008년 10월 17일(금)

I 공무원노동조합 법률의 적용범위

문1.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 법률체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현업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등)의 노동조합이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고, 허용되는 권리의 내용도 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현업직은 노동 3권 보장, 일반직 교육직은 단결권 교섭권 2권만 보장 등)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해야 한다.
- 2) 교육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직과 현업직 공무원은 통합해야 한다.
- 3) 일반직과 교육직은 통합하고, 현업직만 따로 해야 한다.
- 4) 현재처럼 교육직, 일반직, 현업직을 각각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 현업 공무원

문1-1. 우정사업본부 등의 현업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허용은 다른 부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됨에 비해 지나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현행대로 기득권을 인정하여 현업직의 노동3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 2) 우정사업본부 외의 다른 부처 단순 노무직 공무원(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도, 노동 3권을 현업직과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 3)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업직도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공무원과 사립 교원

문1-2.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교육공무원은 단체행동권 불허, 사립 교원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여야 함.
- 2) 교원으로서 국공립과 사립 모두를 대상으로 단체행동권 허용해야함.
- 3) 교원으로서 국공립과 사립 모두를 대상으로 단체행동권 금지해야함.

II 정치적 활동허용

문2. 현행 법률에는 민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은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공무원 노조도 민간노조와 같이 정치적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 2) 민간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 3) 현행처럼 민간노조는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문2-1. 현행 법률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민간노동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민간 노동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면,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활동에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민간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민간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2)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민간단체에의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 3) 현행처럼 민간노동단체 가입을 금지할 필요 없다.



Ⅲ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 현행법률에서

공무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문3-1. 위의 법률규정에서, 헌법기관 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하부 지방 단위기관까지 최소단위로 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지방에 있는 각급 기관별로 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 2) 현행처럼 헌법기관 전체를 최소단위로 하여야 한다.

문3-2. 또한 행정부의 중앙부처를 전체로 최소단위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처별로 최소단위를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1) 부처 단위의 노동조합이 설립 가능하도록 최소단위를 부처별로 허용해야 한다.
- 2) 현행대로 행정부 전체를 최소단위로 하고, 각 부처는 지부형태로 운영해도 문제없다.

문3-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군·구 까지 최소단위로 하지 말고, 광역시와 도 단위를 최소단위로 하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1) 광역시와 도를 최소단위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현행처럼 시·군·구 까지 최소기관 단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3)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단위로 하여야 한다.

문3-4. 교육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있지만, 행정부처럼 전체로서 최소단위로 하는 것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1) 행정부처럼 전국의 교육청 전체를 최소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현행처럼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가입범위

○ 현행 법률에서는

제6조 (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문4-1. 행정부 중앙부처의 5급 행정사무관은 실질적으로 간부급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허용되어야 한다
- 2) 현행처럼 허용하면 안된다.

문4-2. 지방자치단체는 6급 직위가 간부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현행처럼 6급도 노조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 2) 지방에서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허용해야 한다.

문4-3. 결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직급별 노조활동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앙 6급 이하, 지방 7급 이하
- 2) 중앙 5급 이하, 지방 6급 이하
- 3) 중앙과 지방 모두 5급 이하 허용
- 4) 현행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6급 이하 허용

문4-4. 특정직중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소방 공무원은 허용, 경찰공무원은 불허해야 함
- 2) 소방 공무원은 반대, 경찰 공무원은 허용해야 함
- 3) 경찰 소방 공무원 전부 허용해야 함
- 4) 현행처럼 경찰 소방 공무원 전부 불허해야 함



V 가입자 제한범위

문5-1.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6급직 중의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노조가입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하여 6급직은 노동조합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6급직의 대부분이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6급직의 대부분 노조활동을 허용함
- 2) 현행대로 위의 규정에 따라 감독직은 제한적으로 불허함

VI 노조 전임자

문6-1. 노조전임자의 허용은 공무원이 본연의 공직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을 하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자를 허용하고 또한 보수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조전임자는 근본적으로 불허해야 함
- 2) 현행대로 전임자는 허용하되, 보수를 노조원이 보수를 지급하는 휴직으로 처리해야 함
- 3) 현행 민간노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보수도 지급해야 함

VII 교섭권한과 범위

문7-1. 공무원 노·사간 협상에 있어서, 행정부 사용자측 대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 관리하므로, 행정부의 사용자측 대표가 되는 것도 바람직함
- 2) 현행대로 실무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용자측 대표이어야 함

문7-2. 보수를 교섭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실상 보수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처럼 기본적으로 보수문제가 가장 중요한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가 협상의 대상이어야 함
- 2) 보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님

VIII 교섭절차(창구 단일화)와 책임

문8-1. 창구 단일화를 노조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이 있어서, 이러한 창구 단일화의 문제를 중립적으로 관할하여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중립적인 관할기관의 새로운 설치가 필요하다.
- 2) 현행대로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두어야 함

문8-2. 민간의 경우도 복수노조의 실행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노조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초기의 조치로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노갈등이 생기고, 창구단일화가 어려워져 오히려 단체교섭 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관별 단일노조 체제로 하여 노동조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부터라도 복수노조의 허용을 당분간 유예하여, 기관단위로 단일노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한번 허용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가급적 기관단위로 단일노조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 3) 민간도 곧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전향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해나가야 한다.

IX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 현행 법률

제14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문9-1. 현행법률에서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민간노동관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조직이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도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노사관계를 담당하여 조정 중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따라서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미국의 FLRA(연방노사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중립적인 독립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2) 현행 방안처럼 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해도 무방함
- 3) 현행방안을 수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부에서 분리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문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3순위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8	1	5

- | | |
|--------------------------|--------------------------------|
| 1) <u>중립적 조정중재기관의 설치</u> | 2) 여러 관련법률의 통합 |
| 3) 정치적 활동 허용 | 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조정 |
| 5) <u>노동조합 가입범위 조정</u> | 6) 가입자중 지휘감독자 제외 여부 |
| 7)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 | 8) <u>단체교섭의 절차와 권한 및 범위 조정</u> |
| 9)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 마련 | |

문11. 현행 공무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원만함 | 2) 원만함 | 3) 중간 |
| 4) <u>원만하지 못함</u> | 5) 매우 원만하지 못함 | |

문12. 만약,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노동조합측 2) 사용자측 3) 국민의 이해 부족 4) 법률의 규정미비

문13.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u>노사간의 신뢰회복</u> | 2) 단체교섭 절차의 성실한 수행 | 3) 대국민홍보 |
| 4) 노사관계 전문인력 확보 | 5) 공무원 복지 향상 | |

X	인적사항
---	------

* 해당 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		시민단체 및 학계 ↓	
성 별	1) 남 2) 여	성 별	1) <u>남</u> 2) 여
연 령	세	연 령	40 세
학 력	1) 고졸 이하 2) 대졸 3) 대졸이상	학 력	1) 고졸 이하 2) 대졸 3) <u>대졸이상</u>
노/사 유 형	1) 노조측 : 가입노조명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input type="checkbox"/> 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input type="checkbox"/> ③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 사용자측	노조 가입여부	1) <u>노동조합가입함</u> 2) 가입 안함 3) 가입대상 아님
공무원유형	1) 중앙직 공무원 2) 지방직 공무원		
직 급	급		
담당업무	분야		
직 종			
근속연수	년 개월		

[아래 내용은 설문 검증에 필요한 내용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 명 : 황성원	연락처 : (02) 2007 - 0562
	기관명 : 한국행정연구원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